

근로빈곤층의 현황

2010. 4.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I. 근로빈곤층의 현황	1
1. 국내외 경제동향	1
1) 주요국 경제동향	1
2) 국내 경제동향	1
3) 종합	5
2. 근로빈곤 변동추이	6
1) 근로빈곤층 현황	6
2) 근로빈곤층 특성	7
3. 소득계층 구성비 및 역동성	15
1) 가계동향조사에서의 계층 구성비 추이	15
2)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의 역동성	17

1

국내외 경제동향

1

주요국 경제동향

- ☐ 1월중 미국은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실업률도 하락하였음.
- ☐ 일본은 소매판매가 다시 늘어나고 광공업생산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 ☐ 중국은 소비 및 투자가 활기를 보이고, 수출도 개선되면서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 유로지역의 4/4분기 GDP성장률은 +0.5%(연율기준)로 다소 둔화됨.

2

국내 경제동향

가. 내수

- (요약) 소비·설비투자는 감소하였으나,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 ☐ 1월중 소매판매는 세금감면 종료, 폭설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차량연료 등이 줄어들면서 전월대비로는 감소(전월대비 2009.12월 1.2% → 2010.1월 -1.3%)
 - 전년동월대비로는 설 연휴 이동 등으로 증가세 둔화 (12.7% → 6.9%)

□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당폭 감소(전월대비 12월 5.9% → 1월 -9.8%)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소폭 증가 (-17.6% → 0.8%)

□ 건설기성액(명목기준)은 건축 및 토목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전월대비 12월 1.4% → 1월 12.7%)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비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28.3% → 15.6%)

나. 생산활동

● (요약)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소폭으로 감소함.

□ 1월중 제조업 생산은 노후승용차에 대한 감세조치의 종료 등으로 감소 (전월대비 2009.12월 2.4% → 2010.1월 -0.2%)

○ 전년동월대비로는 높은 증가세 지속 (36.0% → 38.9%)

○ 평균가동률은 78.8%로 전월보다 낮아졌으며, 재고출하비율도 재고 감소 및 출하 증대로 하락 (92.6% → 91.7%)

□ 서비스업 생산은 폭설로 인한 거래위축 등으로 소폭 감소 (전월대비 12월 2.4% → 1월 -0.8%)

○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유지 (12월 6.9% → 1월 4.6%)

다. 고용 및 임금

● (요약)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임금은 증가세로 전환됨.

□ 2010년 2월 고용률은 56.6%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계절조정 고용률은 58.3%로 전월대비 0.1%p 상승

○ 취업자는 2,286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5천명 증가

－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 운수업, 제조업 등 비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2만5천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는 2,357만 6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7만9천명 증가

□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4.4%로 전월대비 0.4%p 하락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지난 1월(9.3%) 보다 높아짐.

○ 실업자는 116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4천명 증가

－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일자리 사업 관심증대와 취업시즌을 맞은 청년층의 민간부문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

□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및사회복지업, 운수업, 제조업 증가세 지속
농림어업은 감소세 지속

○ 보건및사회복지(10만명), 운수업(7만7천명), 제조업(4만5천명) 등

○ 농림어업(-14만3천명), 건설업(-8만7천명) 등

- 취업구조는 상용직의 증가세 유지, 자영업자 및 임시직의 감소 둔화
 - 상용직은(59만3천명) 증가세를 유지하고, 자영업자(-7만명), 임시직(-2만4천명) 감소
- 2009.4/4분기중 명목임금은 전년 4/4분기 이래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

라. 물가 및 부동산가격

- (요약)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고, 부동산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함.
-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7%로 전월보다 오름세 둔화(1월 3.1% → 2월 2.7%)
 - 전월대비로는 농축수산물가격을 중심으로 0.4% 상승 (1월 0.4% → 2월 0.4%)
 - 근원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대비)은 전월보다 낮은 1.9%를 기록 (1월 2.1% → 2월 1.9%, 전월대비 0.1% → 0.2%)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4%, 전년동기대비 3.6% 각각 상승
 - 식품은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
 -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5% 각각 상승
- 2월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1월 0.1% → 2월 0.4%)
 - 아파트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0.4% → 0.9%)

3 종합

- 최근들어 국내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임.
 - 1월중 소비 및 설비투자가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세금감면 종료 등 단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수출(일평균 기준)과 건설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내수·생산지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내수도 점차 회복되면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유로지역 과다채무국들의 재정문제 등으로 성장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관련 가계부채 규모는 향후에도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1

근로빈곤층 현황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자료임.
- 근로빈곤층은 18~64세 사이 경제활동인구중에서 빈곤선 미만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 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 2009년 이전의 자료와 직접적 비교는 힘들지만, 2009년의 경우 근로빈곤 규모는 중위소득 50%기준으로 약 215만명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를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중의 근로빈곤 규모는 약 182만명, 실업자 대비는 약 34만명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도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약 228만명으로 전체적인 근로빈곤층은 약 444만명으로 추정됨.

표 1 18~64세기준 근로빈곤수준

(단위: 천명, %)

구분	18~64세 근로빈곤규모			18~64세 근로빈곤율 ¹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6	1,400	2,200	3,261	6.4	10.0	14.9
2007	1,261	2,021	3,074	5.8	9.3	14.2
2008	1,184	1,947	2,890	5.5	9.0	13.4
2009 ²	1,345	2,156	3,267	5.8	9.4	14.3

주: 1) 18~64세중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임

2) 2009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가중치 변경, 소득 및 지출항목 조정 등)에 따라 2006~2008년과의 직접적 비교는 한계를 지님. 개편된 통계자료는 2009년 3월말 제공예정으로 일반공개이후 수정된 분석이 가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표 2 18~64세 근로빈곤 수준(경제활동 상태별)

(단위: 천명, %)

구분		18~64세 근로빈곤규모			18~64세 근로빈곤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6	취업	1,138	1,876	2,892	5.39	8.89	13.70
	실업	262	324	369	35.85	44.36	50.59
	비경활	1,844	2,445	3,117	16.25	21.54	27.46
	전체	3,244	4,645	6,378	9.32	13.46	18.64
2007	취업	1,015	1,728	2,732	4.83	8.22	13.00
	실업	246	293	342	37.41	44.52	51.97
	비경활	1,850	2,395	3,101	16.42	21.26	27.53
	전체	3,111	4,416	6,176	8.95	12.85	18.14
2008	취업	984	1,694	2,592	4.68	8.06	12.33
	실업	200	253	298	33.63	42.45	49.98
	비경활	1,976	2,607	3,290	17.20	22.70	28.64
	전체	3,160	4,554	6,179	8.98	13.10	17.94
2009 ¹	취업	1,074	1,820	2,866	4.91	8.32	13.10
	실업	271	336	401	32.54	40.38	48.19
	비경활	1,699	2,281	2,920	16.03	21.52	27.55
	전체	3,044	4,437	6,187	8.90	13.03	18.25

주: 1) 2009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가중치 변경, 소득 및 지출항목 조정 등)에 따라 2006~2008년과의 직접적 비교는 한계를 지님. 개편된 통계자료는 2009년 3월말 제공예정으로 일반공개이후 수정된 분석이 가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근로빈곤층 특성

□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 근로빈곤층은 18~64세 사이 경제활동인구중에서 빈곤선 미만(중위소득 50%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 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 성과 연령별 빈곤층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은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30~40세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음.

■ 표 3 성별 및 연령별 빈곤층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취업빈곤층		실업빈곤층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18~20세 미만	1.02	1.64	1.11	1.45	0.59	3.33	1.32
20~30세 미만	10.35	13.90	8.41	12.00	18.99	30.81	12.11
30~40세 미만	26.31	15.88	24.79	16.00	33.03	14.84	21.15
40~50세 미만	33.44	31.59	34.39	31.87	29.21	29.09	32.52
50~60세 미만	20.68	23.23	21.94	24.41	15.07	12.73	21.94
60~66세 미만	8.21	13.76	9.35	14.28	3.10	9.20	10.95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빈곤층의 학력수준은 남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녔음에도 근로빈곤층에 속한 경우도 남성은 13.05%, 여성은 8.51%로 나타나고 있음.

■ 표 4 성별 및 학력별 빈곤층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취업빈곤층		실업빈곤층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초등학교	10.23	21.24	11.32	22.66	5.35	8.64	15.67
중학교	13.45	16.95	14.33	17.62	9.54	10.98	15.18
고등학교	52.38	45.16	51.58	44.59	55.94	50.15	48.81
전문대	8.77	7.12	8.87	6.31	8.31	14.27	7.95
대학교	13.05	8.51	11.57	7.68	19.63	15.96	10.81
대학원	2.13	1.02	2.33	1.14	1.23	0.00	1.58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빈곤층의 종사상 지위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이 62.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 남성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48.47%) 이외에도 자영자의 비중이 27.81%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5 성별 및 종사상지위별 빈곤층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¹		소계
	남	여	
상용근로자	15.36	11.52	13.37
임시근로자	25.55	39.79	32.92
일용근로자	22.92	22.98	22.95
고용주	7.08	1.51	4.20
자영자	27.81	16.02	21.70
무급가족 종사자	1.29	8.17	4.85
계	100.00	100.00	100.00

주: 1) 취업자중 빈곤선 미만의 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의 61.42%(남성), 62.05%(여성)는 일주일에 36시간 이상을 근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미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나름대로 지속적일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지 않다는 것이며, 앞에서 분석한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볼 때, 임시·일용, 자영업으로 이들 업종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6 성별 및 근로시간별 빈곤층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취업빈곤층		실업빈곤층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일을 하지 않음	21.70	12.04	4.11	2.13	100.00	100.00	16.92
0~18시간 미만	5.82	10.06	7.12	11.20	0	0	7.92
18~36시간 미만	11.06	15.84	13.54	17.63	0	0	13.42
36시간 이상	61.42	62.05	75.23	69.04	0	0	61.73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빈곤층의 낮은 소득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빈곤층의 소비지출 수준은 비빈곤층 소비지출의 55.2%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교육비 지출수준은 비빈곤층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을 통한 탈빈곤이 쉽지 않을 것으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외에 의류 및 신발은 비빈곤층의 1/3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표 7 소비지출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근로빈곤층	근로빈곤층 : 취업	근로빈곤층 : 실업	비빈곤층	비경활인구	연평균
소비지출	1,295	1,308	1,215	2,344	2,178	2,225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06	208	192	299	309	296
주류 및 담배	24	24	26	31	25	29
의류 및 신발	59	61	51	150	133	139
주거 및 수도광열	176	176	175	216	220	21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6	38	29	83	71	76
보건	82	82	81	137	147	136
교통	152	151	160	313	257	286
통신	105	105	104	149	134	142
오락문화	58	59	58	122	118	116
교육	149	154	117	306	312	297
음식숙박	151	155	131	331	269	301
기타상품 및 서비스 (기타소비지출)	95	96	92	208	182	193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주거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비빈곤층의 경우 전세 및 보증부 월세의 경우가 32.18%인 반면에 근로빈곤층의 경우 47.13%로 비빈곤층에 비해 14.95% 포인트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특히 비빈곤층에 비해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2배 정도 높다는 점에서 주거비 지출로 인해 다른 필요 비목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표 8 주거현황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비경활 인구	소계
		취업	실업			
자기집	49.45	49.64	48.29	64.48	65.79	63.89
무상주택	2.37	2.38	2.31	2.52	2.52	2.51
사택	0.06	0.07	0.00	0.47	0.51	0.46
전세	22.37	22.66	20.64	19.84	19.39	19.87
영구임대	0.99	0.88	1.70	0.36	0.79	0.53
보증부월세	24.76	24.37	27.06	12.34	11.00	12.75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가구원수별 분포에 있어 근로빈곤층의 경우 1~2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비빈곤층의 경우에는 3~4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9 가구원수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비경활 인구	소계
		취업	실업			
1인가구	14.60	13.50	21.18	6.91	6.67	7.35
2인가구	22.31	22.50	21.15	14.60	16.32	15.62
3인가구	21.70	21.48	23.03	25.64	27.72	26.01
4인가구	29.57	30.39	24.66	39.46	36.97	38.06
5인가구	9.10	9.40	7.32	10.38	9.64	10.07
6인가구 이상	2.72	2.73	2.66	3.01	2.67	2.89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유형별 특성을 보면 비빈곤가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비빈곤층의 51.92%가 맞벌이가구인 반면에 근로빈곤층은 일반가구로 혼자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10 빈곤 및 비빈곤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비경활 인구	소계
		취업	실업			
노인가구	0.04	0.04	0.00	0.00	0.03	0.01
모자가구	3.34	3.62	1.63	1.34	1.74	1.59
맞벌이가구	23.81	27.29	2.92	51.92	10.29	37.57
일반가구	72.82	69.05	95.45	46.74	87.94	60.83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위와 같은 가구유형별 차이는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가구내 취업자 규모에 영향을 미쳐, 근로빈곤층은 취업자가 1인인 경우가 57.24%로 나타나는 반면에 비빈곤층은 50.24%로 다소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에 있어서도 근로빈곤층의 경우 단순노무 (27.9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원 등 숙련된 인적자본을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근로는 하는 경우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표 11 취업인원수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비경활 인구	소계
		취업	실업			
0인	8.75	0.49	58.33	0.30	20.00	6.78
1인	57.24	61.02	34.56	31.59	57.24	40.98
2인	29.42	33.32	6.04	50.24	18.43	39.32
3인	4.16	4.68	1.07	13.50	4.01	10.04
4인 이상	0.43	0.50	0.00	4.36	0.31	2.89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표 12 직업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¹	비빈곤층	소계
관리자 및 전문가	10.52	23.44	22.37
사무종사자	7.86	17.62	16.80
서비스 종사자	13.91	10.75	11.01
판매종사자	15.39	13.22	13.4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42	0.14	0.16
기능원	14.52	10.30	10.66
장치, 기계조작 등	9.42	11.61	11.43
단순노무	27.96	12.92	14.17

주: 1) 취업자중 빈곤선 미만의 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비빈곤층과 비교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위기상황하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시 동 제도에 대해 보험료 납부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들이 포함된 가구들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표 13 사회보험 가입실태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취업	실업			
직역연금	보험료납부	0.22	0.25	0.03	9.96	7.26	8.51
	보험료=0	99.78	99.75	99.97	90.04	92.74	91.49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	보험료납부	31.64	33.60	19.88	70.80	54.08	63.20
	보험료=0	68.36	66.40	80.12	29.20	45.92	36.80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	보험료납부	65.51	66.17	61.58	92.13	80.56	86.91
	보험료=0	34.49	33.83	38.42	7.87	19.44	13.09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고용 및 산재	보험료납부	15.59	16.66	9.17	52.85	38.38	46.06
	보험료=0	84.41	83.34	90.83	47.15	61.62	53.94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소득기준으로 빈곤선 미만에 있으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비빈곤층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정부보조금을 수혜받는 계층이 17.43%라는 점에서 이들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표 14 정부보조금 수혜 분포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취업	실업			
수혜	24.94	23.88	31.30	17.43	25.24	20.27
비수혜	75.06	76.12	68.70	82.57	74.76	79.73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가계동향조사에서의 계층 구성비 추이

□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가구 및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의 5분위배율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가구(1인 및 농가제외)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농가 가구들의 소득이 나아진 것을 추정할 수 있음.

표 15 5분위배율 변화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전국가구	시장소득	6.66	7.10	7.39	7.70
	가처분소득	5.39	5.61	5.71	5.76
전가구 (1인 및 농가제외)	시장소득	5.75	6.08	6.16	6.10
	가처분소득	4.82	4.97	4.97	4.92
도시가구 (1인 및 농가제외)	시장소득	5.39	5.80	5.92	6.06
	가처분소득	4.62	4.86	4.87	4.9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통계청, 홈페이지).

□ 시장소득 기준으로 계층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중간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빈곤층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전국가구기준).

- 상류층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표 16 계층구성비 변화(시장소득)¹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전국가구	빈곤층	16.7	17.4	17.5	18.1
	중간층	60.8	59.4	58.8	58.7
	상류층	22.5	23.2	23.7	23.3
전가구(1인 및 농가제외)	빈곤층	14.7	15.4	15.0	15.4
	중간층	63.8	62.6	62.3	62.6
	상류층	21.5	22.0	22.6	22.0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빈곤층	13.7	14.8	14.7	15.3
	중간층	65.1	63.5	62.9	62.6
	상류층	21.2	21.7	22.4	22.1

주: 1)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중간층은 50~150% 미만,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통계청, 홈페이지).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계층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소득과 마찬가지로 중간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빈곤층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전국가구기준)

○ 상류층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표 17 계층구성비 변화(가처분소득)¹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전국가구	빈곤층	14.4	14.8	15.0	15.2
	중간층	64.9	63.8	63.2	63.2
	상류층	20.7	21.4	21.8	21.6
전가구(1인 및 농가제외)	빈곤층	12.7	12.9	13.0	13.1
	중간층	67.4	66.7	66.2	66.7
	상류층	19.9	20.4	20.8	20.2
도시가구(1 인 및 농가제외)	빈곤층	12.0	12.6	12.5	13.1
	중간층	68.0	67.0	66.4	66.7
	상류층	20.0	20.4	21.0	20.2

주: 1)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중간층은 50~150% 미만,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통계청, 홈페이지).

2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의 역동성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과 2008년의 소득계층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빈곤층 및 상류층은 감소하고, 중산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우리사회가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와는 상반된 결과임.

표 18 연도별 소득계층비율(인구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 소득	
	2005년	2008년	2005년	2008년
빈곤층 ¹⁾	18.54	16.96	14.61	13.20
중산층 ¹⁾	50.01	52.20	57.17	60.31
상류층 ¹⁾	31.45	30.83	28.21	26.48

주: 1) 소득계층구분: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계층),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계층),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와 2차(2008년)

- 분석기간(2005~2008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계층 변동은 다소 높게 나타남.
- 먼저 시장소득 기준에 의한 계층 변동을 살펴보면, 2008년 빈곤층은 2005년 빈곤층이 약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산층에서 약 30.6%, 상류층에서 약 5.5%가 이동해 옴¹⁾.
- 2008년 중산층은 2005년 중산층이 약 69.6%이고, 빈곤층에서 약 14.0%, 상류층에서 약 16.3%가 이동해 옴.

1) 계층 변동의 주요 요인은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또는 실업자에서 취업자 전환되는 경우임. 특히 소득이 계층구분 경계선 소득 근방에 있는 가구는 계층변동이 쉽게 이루어짐.

- 2008년 상류층은 2005년 상류층이 약 70.6%이고, 빈곤층에서 약 2.5%, 중산층에서 약 26.9%가 이동해 옴.

■ 표 19 소득계층이동(시장소득 기준, 2008년 기준)

(단위: %)

2008년 \ 2005년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빈곤층	63.89	14.04	2.54
중산층	30.61	69.62	26.87
상류층	5.50	16.34	70.59
계	100.00	100.00	100.00

- 주: 1) 소득계층구분: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계층),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계층),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임.
 2) 비율은 2008년 해당소득계층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5년 각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임.

■ (참고) 소득계층이동(시장소득 기준, 2005년 기준)

(단위: %)

2008년 \ 2005년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계
빈곤층	57.51	38.42	4.08	100.00
중산층	10.54	72.91	16.54	100.00
상류층	3.03	27.39	69.58	100.00

- 주: 1) 소득계층구분: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계층),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계층),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임.
 2) 비율은 2005년 해당소득계층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8년 각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임.

- 다음으로 가처분소득 기준에 의한 계층 변동을 살펴보면, 2008년 빈곤층은 2005년 빈곤층이 약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산층에서 약 40.2%, 상류층에서 약 5.7%가 이동해 옴.
- 2008년 중산층은 2005년 중산층이 약 72.3%이고, 빈곤층에서 약 12.3%, 상류층에서 약 15.4%가 이동해 옴.
- 2008년 상류층은 2005년 상류층이 약 67.1%이고, 빈곤층에서 약 2.5%, 중산층에서 약 30.3%가 이동해 옴.

■ 표 20 소득계층이동(가처분 소득기준, 2008년 기준)

(단위: %)

2005년 \ 2008년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빈곤층	54.15	12.32	2.52
중산층	40.17	72.33	30.34
상류층	5.69	15.35	67.14
계	100.00	100.00	100.00

- 주: 1) 소득계층구분: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계층),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계층),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임.
 2) 비율은 2008년 해당소득계층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5년 각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임.

■ (참고) 소득계층이동(가처분 소득기준, 2005년 기준)

(단위: %)

2005년 \ 2008년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계
빈곤층	47.02	48.65	4.33	100.00
중산층	9.36	76.64	14.00	100.00
상류층	2.73	33.49	63.78	100.00

- 주: 1) 소득계층구분: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계층),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계층),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임.
 2) 비율은 2005년 해당소득계층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8년 각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임.

복지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2010. 4. 17.

사회정책을 선도하는
Think-Tank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ontents

I

경제사회 환경

II

한국 복지의 현위상

III

기본방향

IV

당면과제와 정책대응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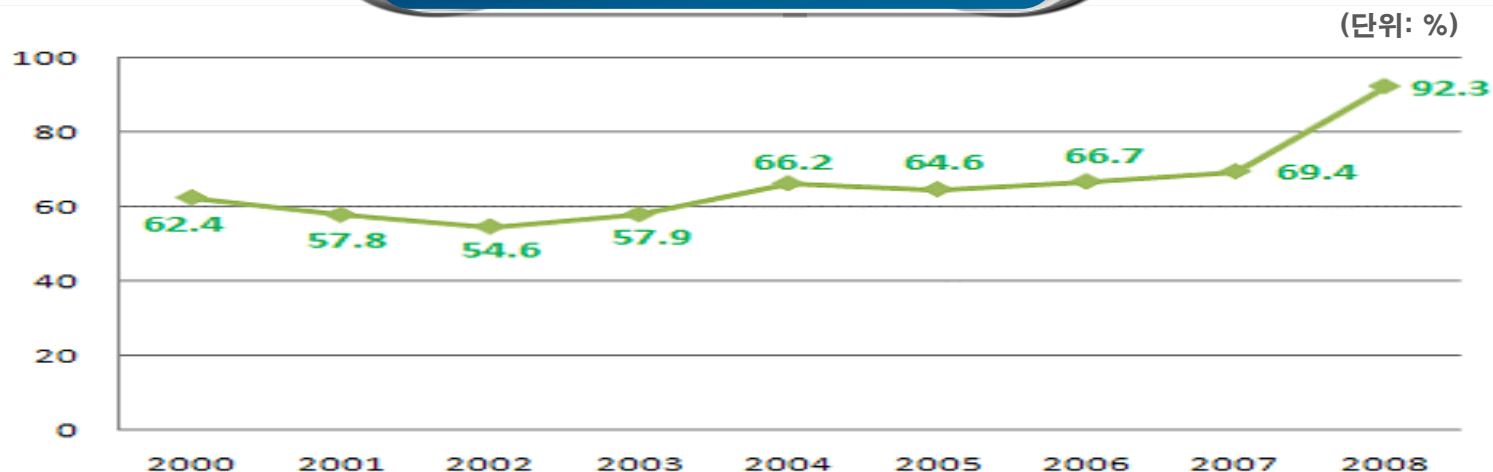
경제사회 환경

1. 세 계 화
2. 양 극 화
3. 고 령 화
4. 저 출 산



1. 세계화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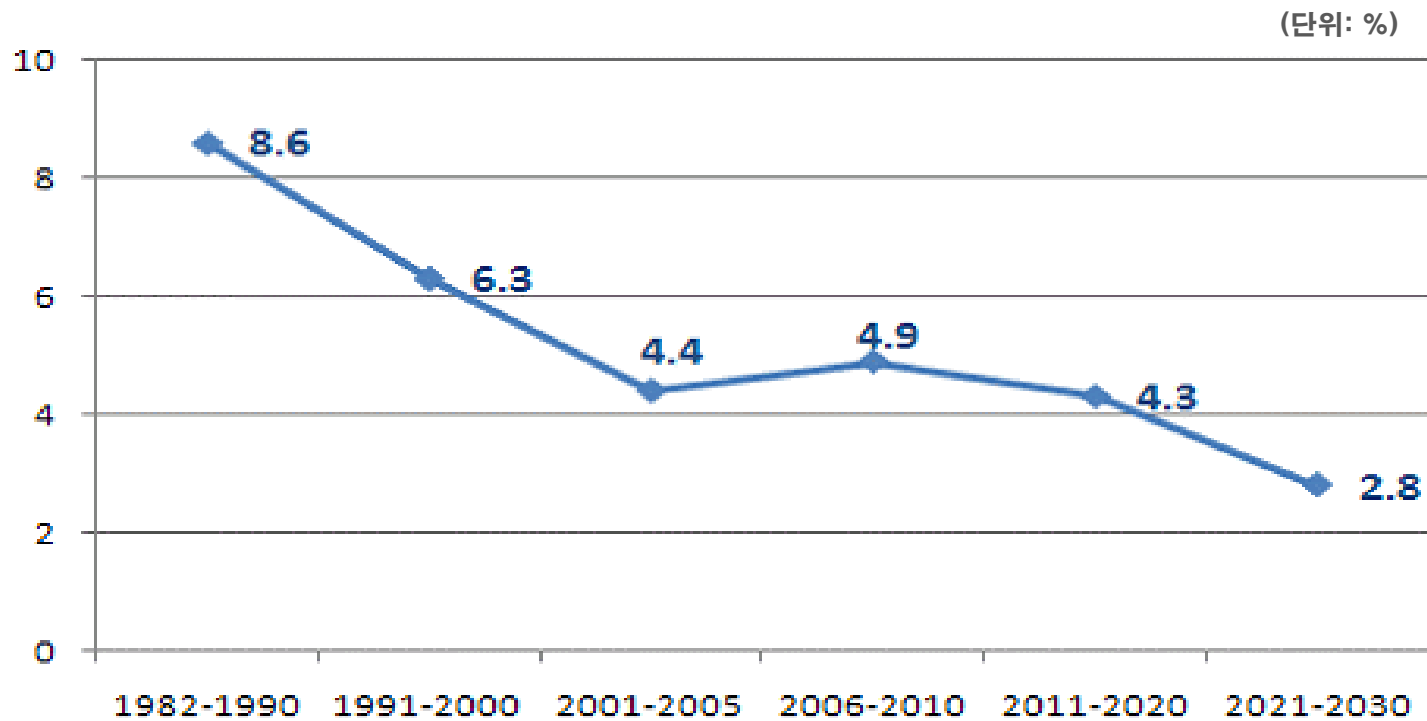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말레이시아	168.5%
헝가리	138.2%
대만	126.8%
네덜란드	118.4%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

일본	31.6%
인도	37.7%
호주	39.1%
영국	41.2%
스페인	43.3%
프랑스	46.0%
러시아	47.0%

잠재성장율의 저하 경향



자료: 비전2030 민간작업단

중산층 감소

근로빈곤층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감소

- 중간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빈곤층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전국가구 기준).

계층구성비 변화(시장소득)¹⁾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전국가구	빈곤층	16.7	17.4	17.5	18.1
	중간층	60.8	59.4	58.8	58.7
	상류층	22.5	23.2	23.7	23.3
전가구 (1인 및 농가제외)	빈곤층	14.7	15.4	15.0	15.4
	중간층	63.8	62.6	62.3	62.6
	상류층	21.5	22.0	22.6	22.0
도시가구 (1인 및 농가제외)	빈곤층	13.7	14.8	14.7	15.3
	중간층	65.1	63.5	62.9	62.6
	상류층	21.2	21.7	22.4	22.1

주: 1)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중간층은 50~150% 미만,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통계청, 홈페이지).

중산층 감소

근로빈곤층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 시장소득과 마찬가지로 중간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빈곤층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전국가구 기준).

계층구성비 변화(가처분소득)¹⁾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전국가구	빈곤층	14.4	14.8	15.0	15.2
	중간층	64.9	63.8	63.2	63.2
	상류층	20.7	21.4	21.8	21.6
전가구(1인 및 농가제외)	빈곤층	12.7	12.9	13.0	13.1
	중간층	67.4	66.7	66.2	66.7
	상류층	19.9	20.4	20.8	20.2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빈곤층	12.0	12.6	12.5	13.1
	중간층	68.0	67.0	66.4	66.7
	상류층	20.0	20.4	21.0	20.2

주: 1)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중간층은 50 ~ 150% 미만,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통계청, 홈페이지).

생산증 감소

근로빈곤증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근로빈곤증 증가

▶ 18~64세 근로빈곤 규모는 2009년 현재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약 215만명에 이르며, 근로빈곤율은 9.4%로 분석

- 근로빈곤율은 2006년 10.0%에서 2008년 9.0%까지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9.4%로 증가

18~64세 기준 근로빈곤수준

(단위: 천명, %)

구분	18~64세 근로빈곤규모			18~64세 근로빈곤율 ¹⁾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6	1,400	2,200	3,261	6.4	10.0	14.9
2007	1,261	2,021	3,074	5.8	9.3	14.2
2008	1,184	1,947	2,890	5.5	9.0	13.4
2009 ²⁾	1,345	2,156	3,267	5.8	9.4	14.3

주 : 1) 18~64세중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임.

2) 2009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가중치 변경, 소득 및 지출항목 조정 등)에 따라 2006~2008년과의 직접적 비교는 한계를 지님. 개편된 통계자료는 2009년 4월말 제공예정으로 일반공개이후 수정된 분석이 가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중산층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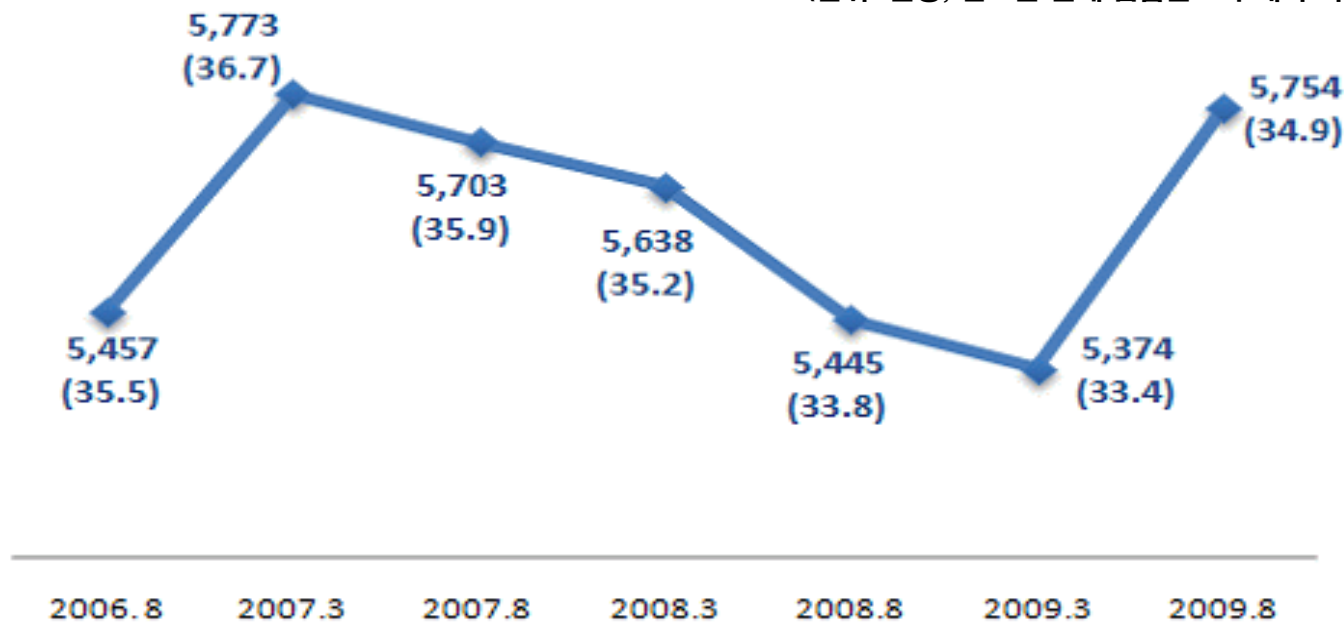
근로빈곤층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괄호는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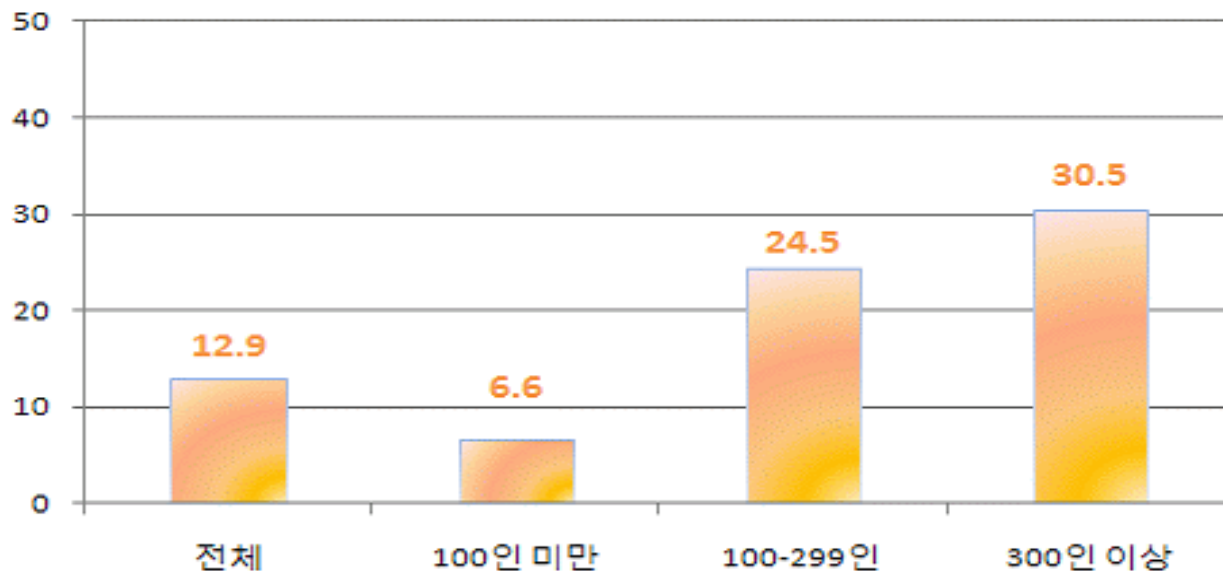
중산층 감소

근로빈곤층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정규-비정규직 사업장 규모별 임금총액 격차(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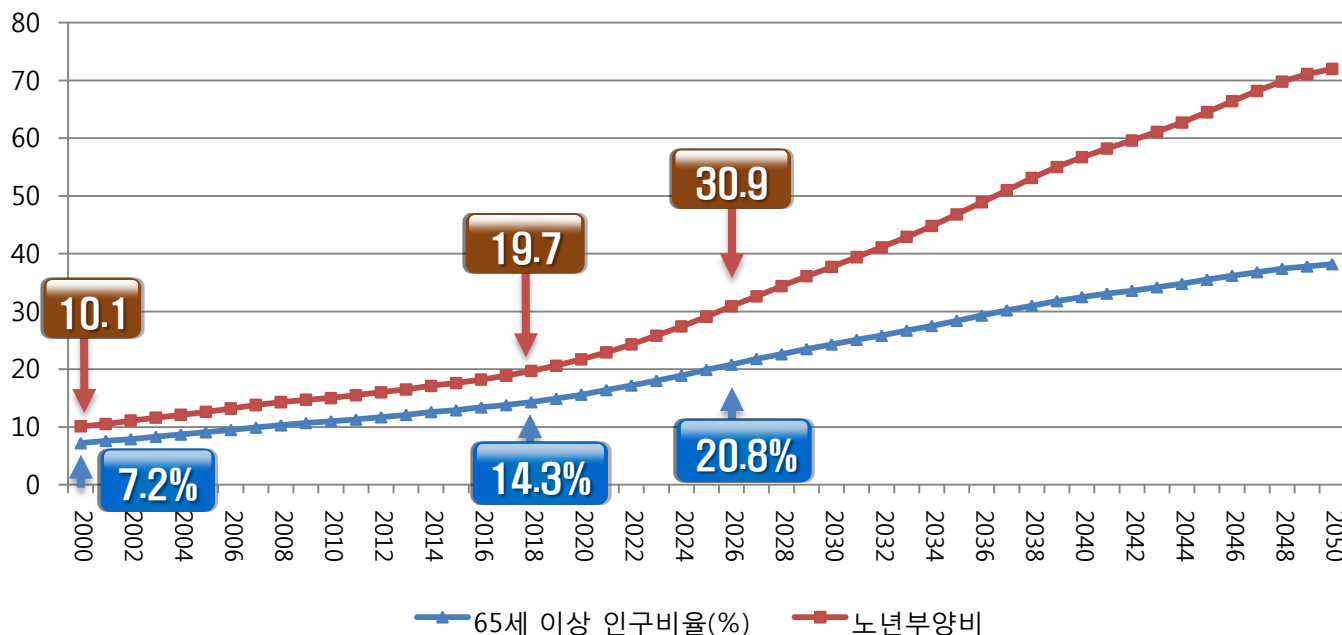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고령화 추이

-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빠른 고령화 진행
- 2050년에는 80세 이상 인구비율이 12.6% 도달 (OECD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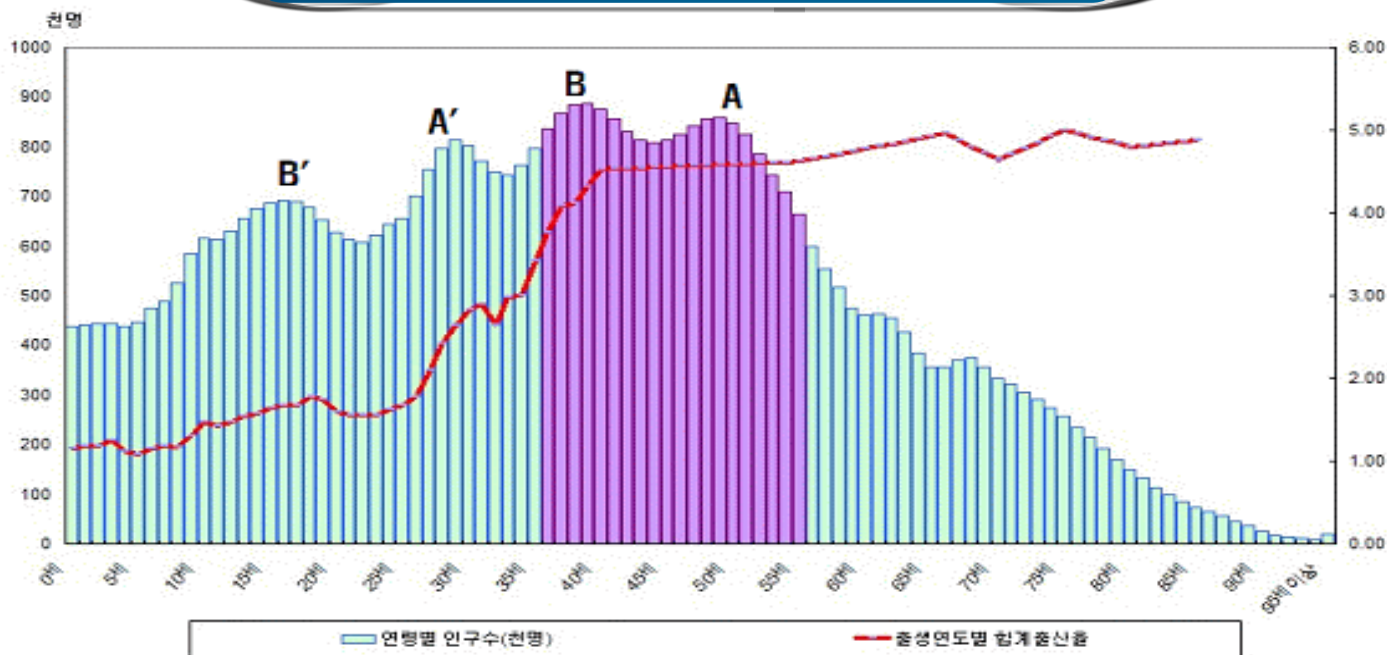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노년 부양비 추이



출산율 추이와 인구구조

-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로서, 현재 출산수준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2010년부터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어 2018년까지 임금근로자 311만 여명이 은퇴할 것으로 추정(현대경제연구원, 2009)

합계출산율 추이와 베이비 붐 & 버스트



Ⅱ

한국 복지의 현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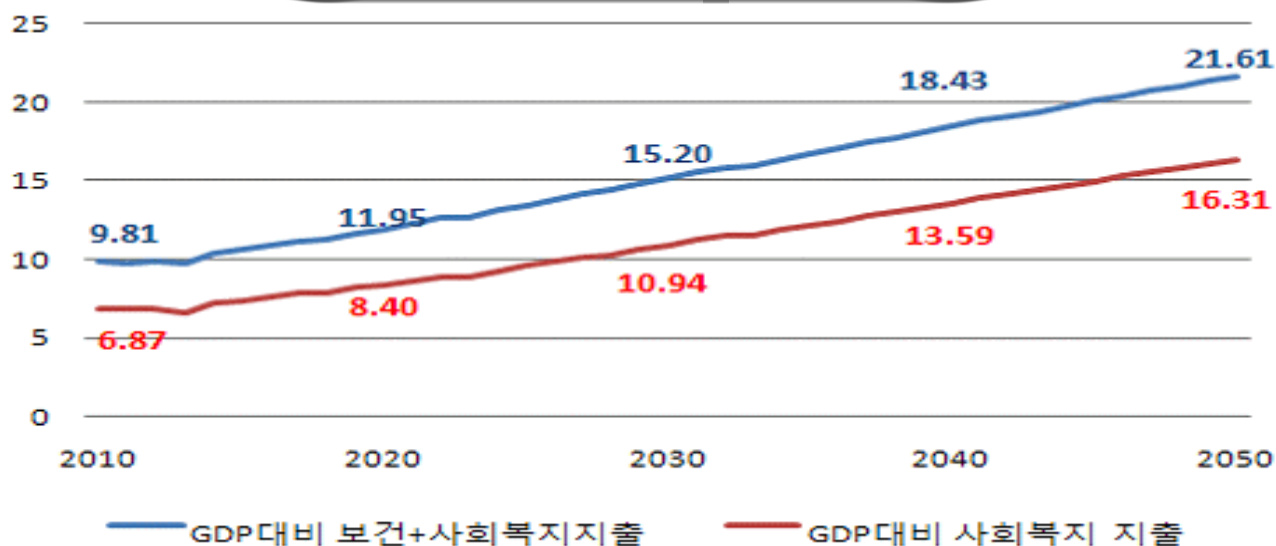
1. 복지 수요 증가
2. 사각지대 존재
3. 복지재정 위기
4. 관리운영 비효율



1. 복지 수요 증가

-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2010년 GDP 대비 6.87%에서 2050년 16.31%로 9.44%p 증가할 것으로 추계
- 보건분야 재정지출을 합칠 경우 GDP 대비 비중은 2010년 9.81%에서 21.61%로 11.80%p 증가할 것으로 추계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추이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9)

2. 사각지대 존재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란?

-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계층
- 중위소득 50%미만 근로빈곤층 규모는 약 262만명으로 추계(2008년)

✓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오해:**
근로빈곤층은 가구소득 기준 개념이며, 저임금근로자는 개인 근로소득 기준 개념. 저임금 근로자 중 일부는 빈곤가구에 속하지 않으며 이들은 근로 빈곤층이 아님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규모(2008년 기준)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실태

- 근로빈곤층의 건강보험 가입율은 65.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국민연금과 고용 및 산재보험은 31.6%과 15.6%에 그침.

사회보험 가입실태

(단위: %)

구분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비경활인구	소계
		취업	실업				
직역연금	보험료납부	0.2	0.3	-	10.0	7.3	8.5
	보험료=0	99.8	99.7	100.0	90.0	92.7	91.5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민연금	보험료납부	31.6	33.6	19.9	70.8	54.1	63.2
	보험료=0	68.4	66.4	80.1	29.2	45.9	36.8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건강보험	보험료납부	65.5	66.2	61.6	92.1	80.6	86.9
	보험료=0	34.5	33.8	38.4	7.9	19.4	13.1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 및 산재	보험료납부	15.6	16.7	9.2	52.9	38.4	46.1
	보험료=0	84.4	83.3	90.8	47.1	61.6	53.9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OECD 각국의 지니계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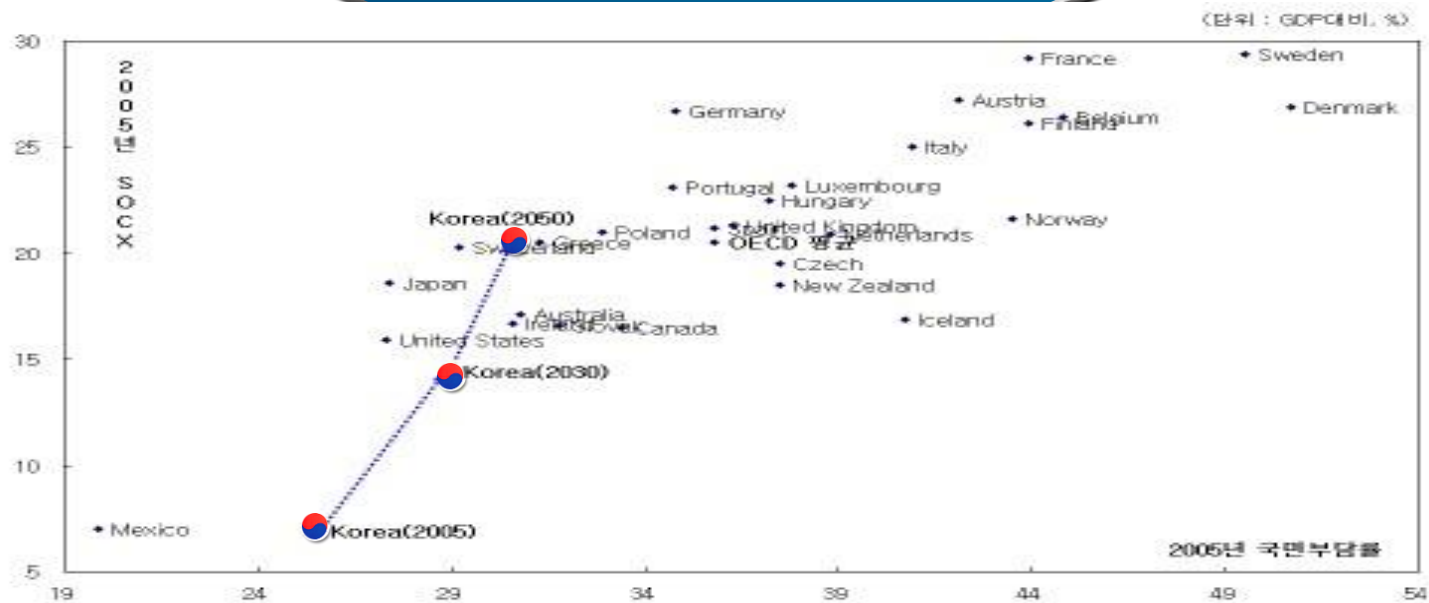
	1990년대		2000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호 주	0.294	0.423	0.295	0.421
캐나다	0.287	0.389	0.305	0.390
체 코	0.251	0.371	0.260	0.404
덴마크	0.214	0.348	0.226	0.355
핀란드	0.234	0.382	0.260	0.371
프랑스	0.277	0.414	0.272	0.403
독 일	0.270	0.363	0.272	0.393
그리스	0.322	0.405	0.335	0.413
이탈리아	0.349	0.464	0.345	0.456
일 본	0.290	0.338	0.310	0.362
네덜란드	0.254	0.377	0.250	0.332
뉴질랜드	0.324	0.428	0.330	0.430
노르웨이	0.249	0.341	0.260	0.363
폴란드	0.390	0.553	0.370	0.532
포르투갈	0.342	0.431	0.348	0.433
스웨덴	0.216	0.374	0.242	0.375
스위스	0.285	0.336	0.264	0.324
영 국	0.304	0.424	0.319	0.432
미 국	0.351	0.417	0.346	0.420
OECD-19	0.290	0.399	0.295	0.400

자료: OECD, 가구소득 분포 자료 분석.

3. 복지재정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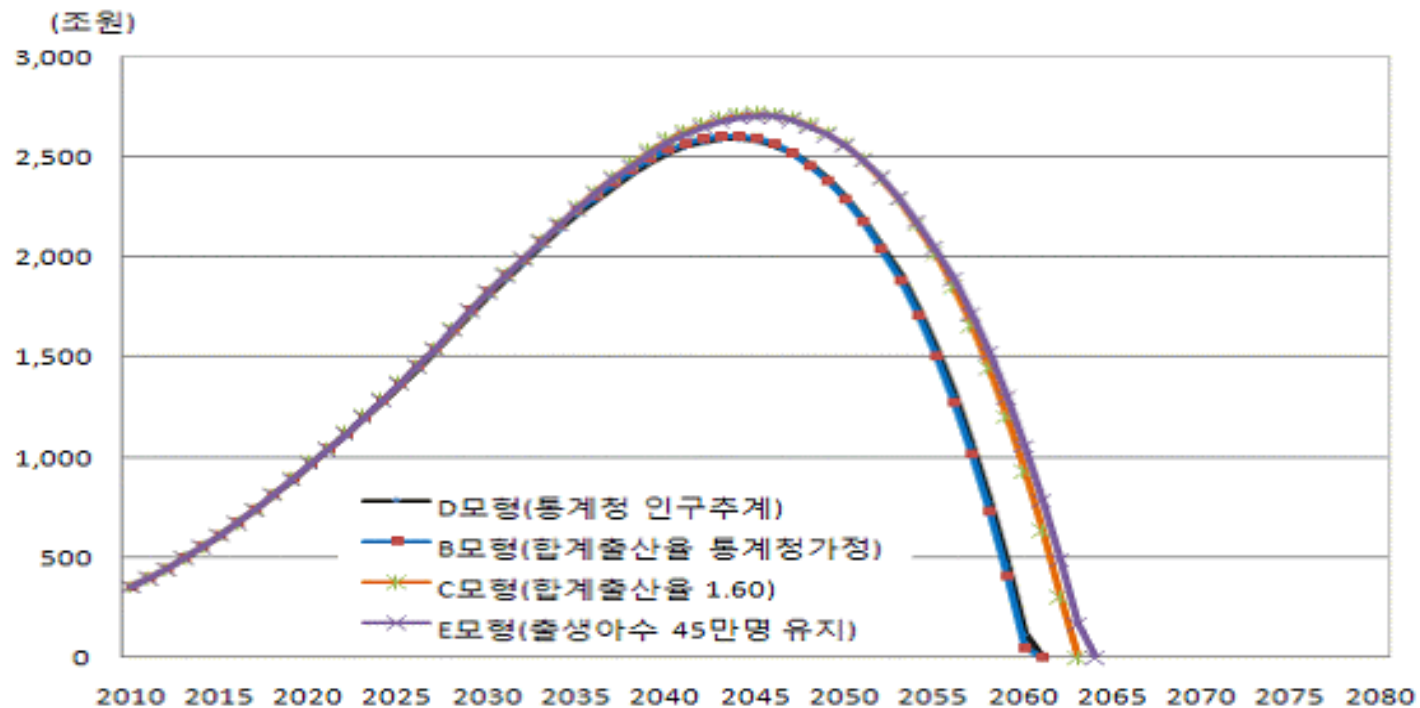
- OECD 사회보장비(SOCX) 통계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8.6%에서 2050년 20.8%로 증가
- 2050년 20.8%는 2005년 OECD 국가 평균 공공사회지출 규모(20.5%)와 비슷한 수준

공공사회지출규모 국제비교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9)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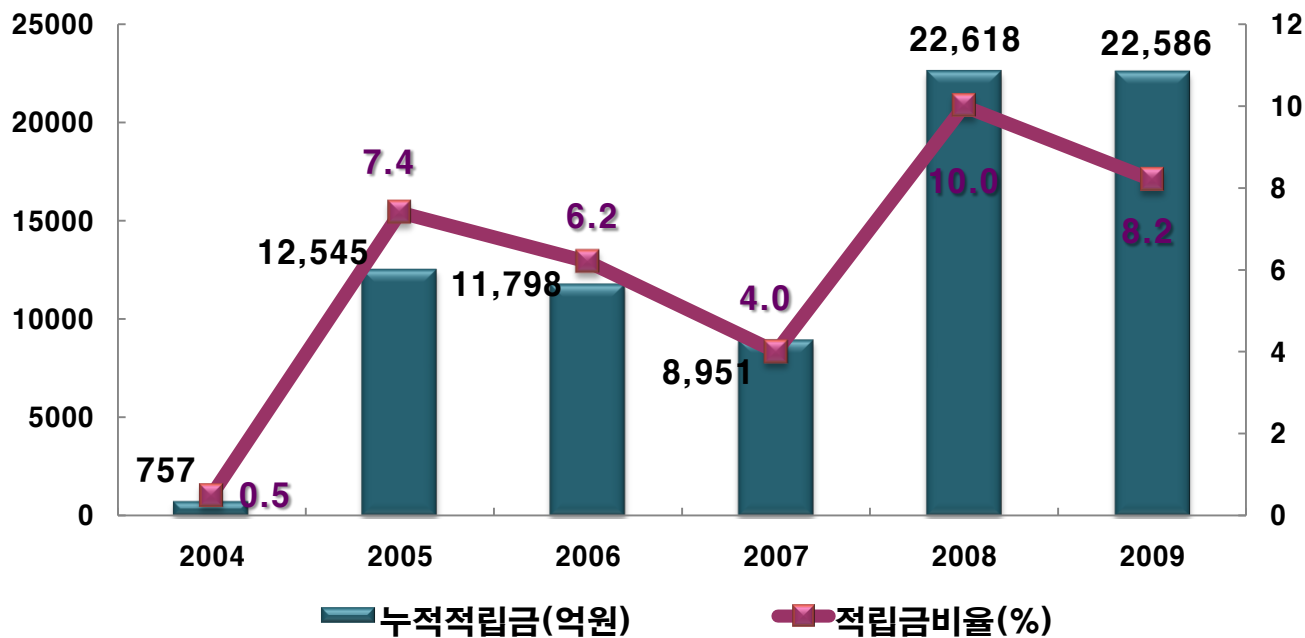


건강보험 재정위기

- ▶ 2001년 재정 파탄 이후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2004년에 누적수지 흑자를 회복했으나, 2006년과 2007년에 당기적자 발생
- ▶ 2009년의 경우 차상위 전환영향, 보장성강화,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증가하여 32억원의 당기적자 기록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 출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수 입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수 지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누 적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08년 22,618억원에서 2009년 22,586억원으로,
- ▶ 누적적립금비율은 같은 기간 10.0%에서 8.2%로 감소



4. 관리운영 비효율

사회보험 기관 종사자 현황 (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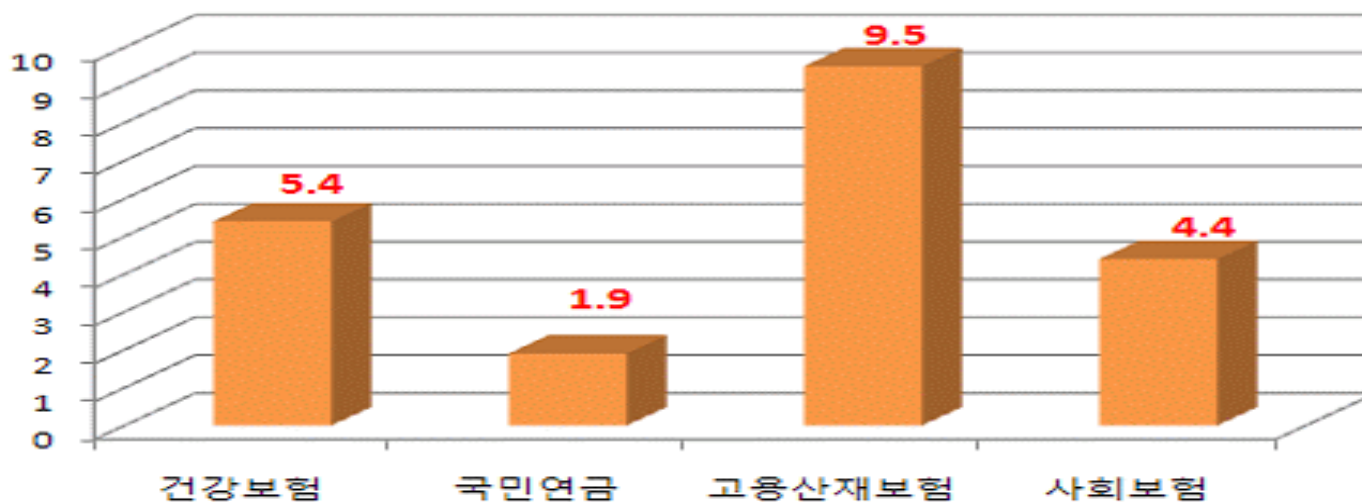
(단위: 명)

사회보험기관						
계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연금 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근로복지 공단
21,868	11,254	1,740	4,817	195	514	3,348

자료: 사회보험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자체 사회복지직 인력은 2008년 복지부 취합 자료

보험료 대비 관리비 비중

(단위: %)



자료: 각 공단 내부자료

Ⅲ

기본방향

1. 저출산 · 고령화 대응
2. 사회안전망 체계화
3. 노동 · 보건 · 복지 서비스 통합
4. 고용창출 지향적 시스템 구축
5. 관리 및 제도 효율성 제고
6. 가계 · 기업 · 사회 · 국가의 공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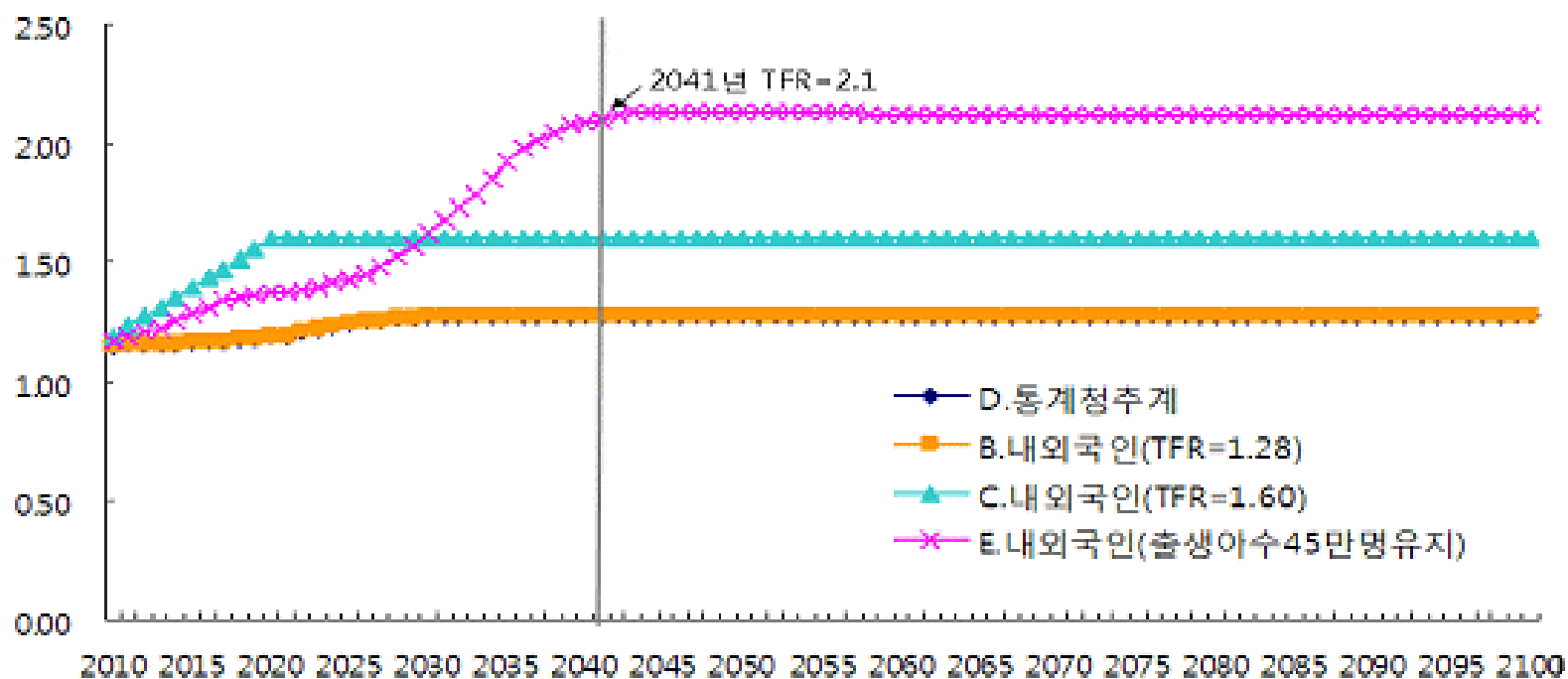
▶ 출산정책의 목표변수 변경: 합계출산율 → 출생아동수

- 출산율을 일정 수준까지 바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목표 출생아동수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
 - 목표 출생아동수를 45만명 수준으로 설정
 - 45만명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가임여성인구수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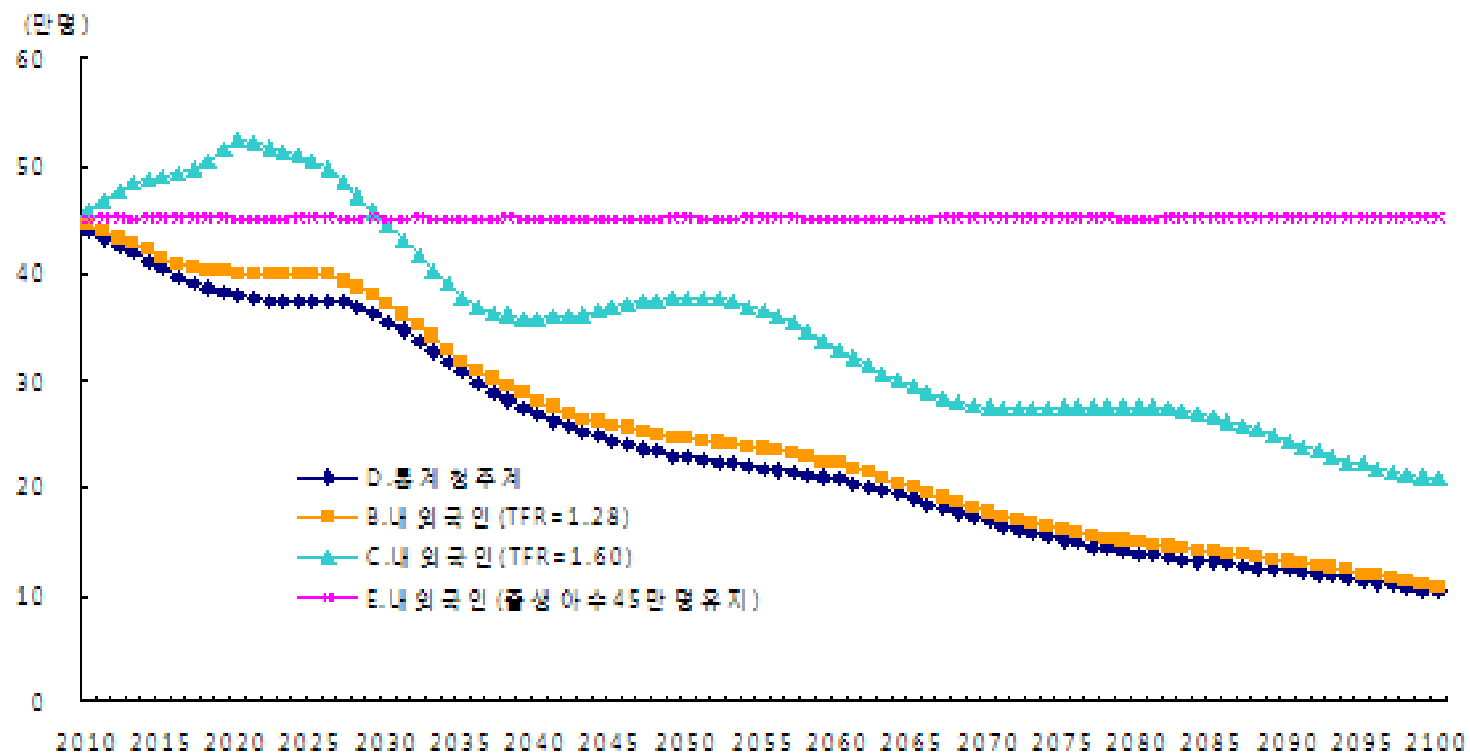
▶ 인구 기준통계 변경

- 현재 인구 기준통계는 통계청의 센서스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 추계인구이나, 최근 인구전망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
- 5년 단위의 중기 인구추계의 경우 주소지별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도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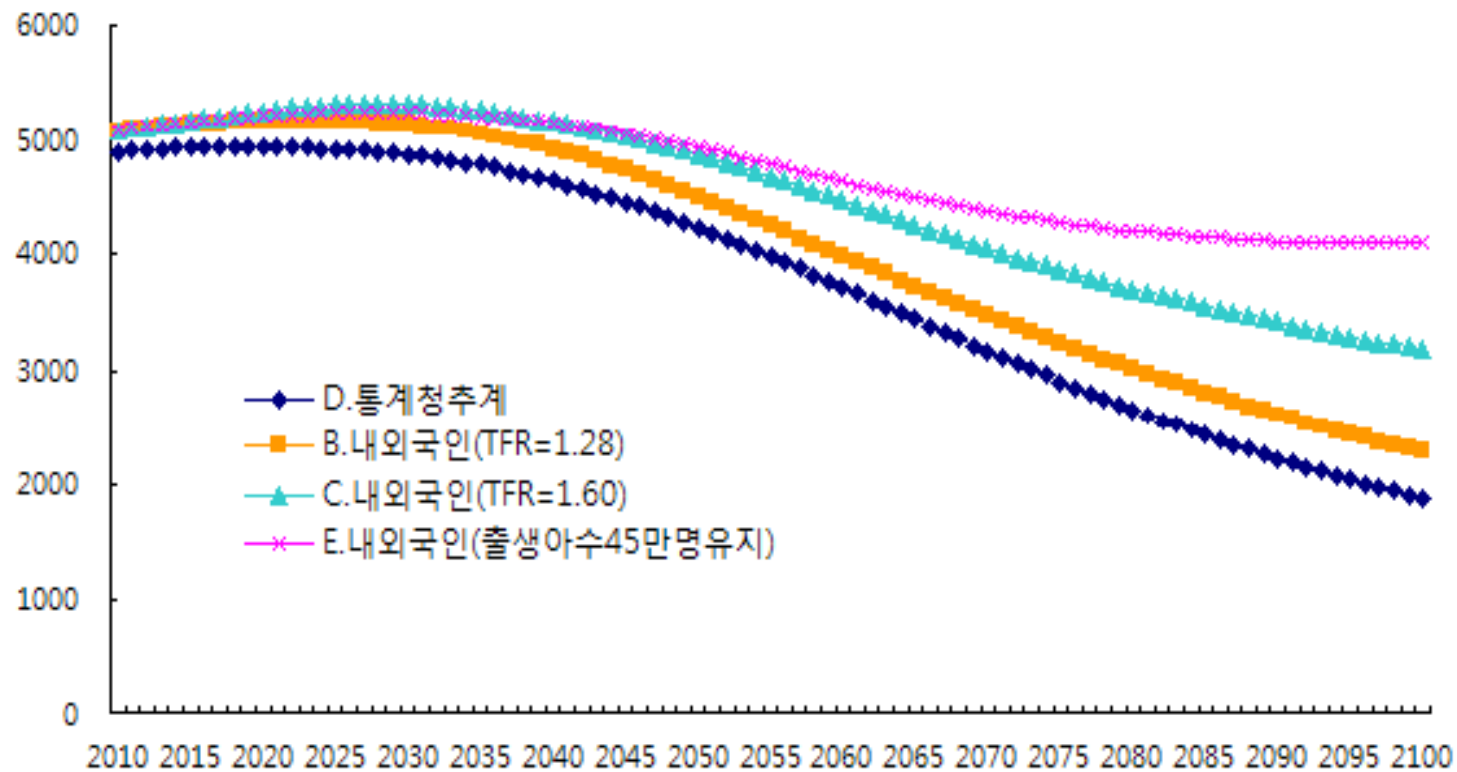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변동 가정(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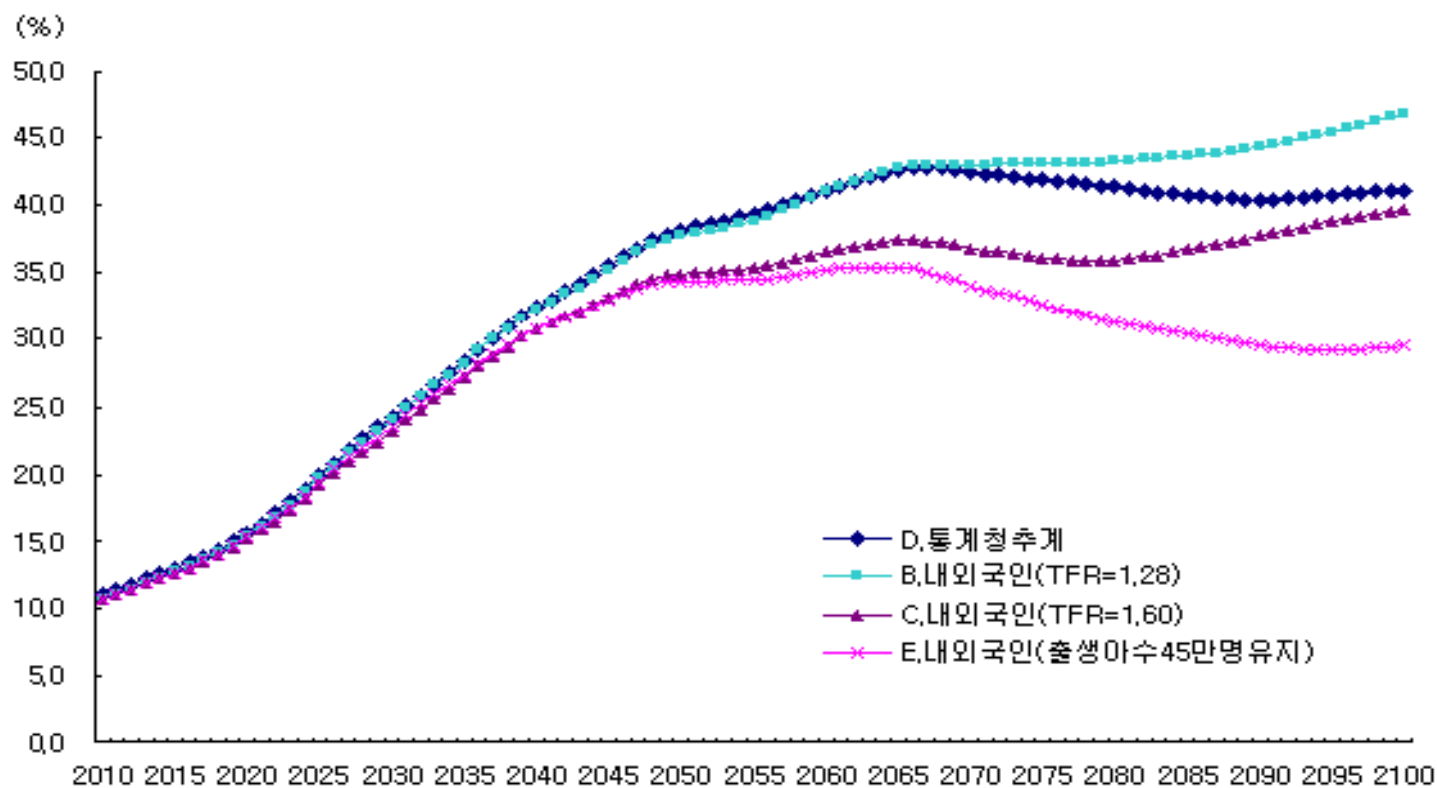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생아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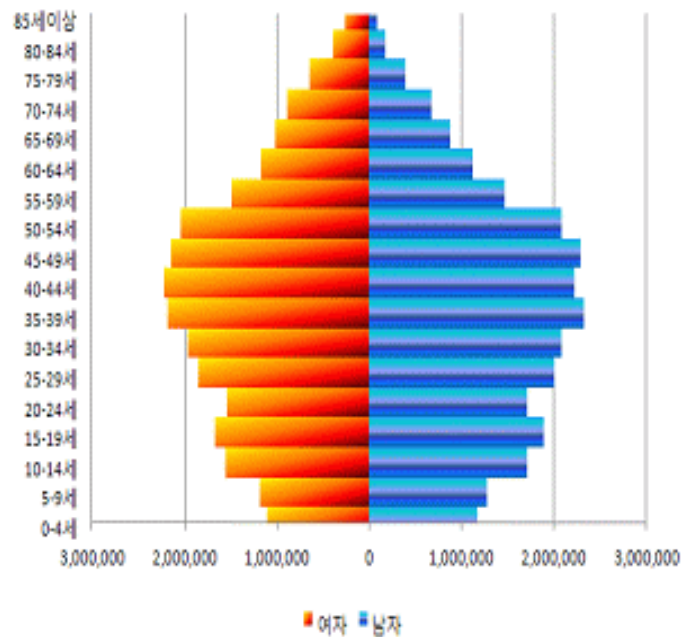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총인구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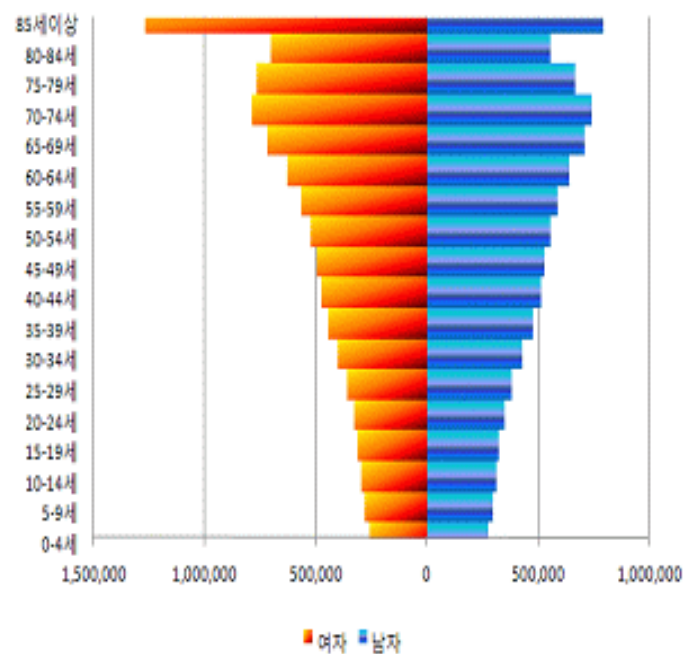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노인인구비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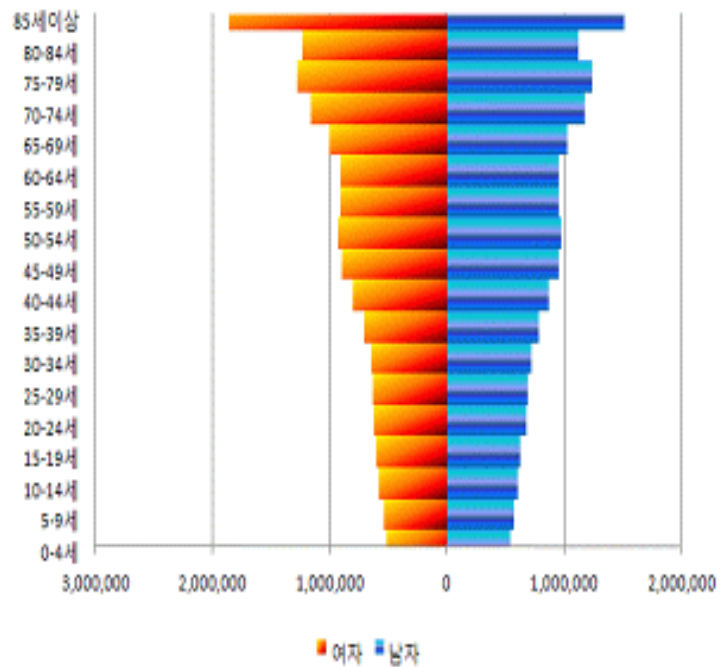
현재인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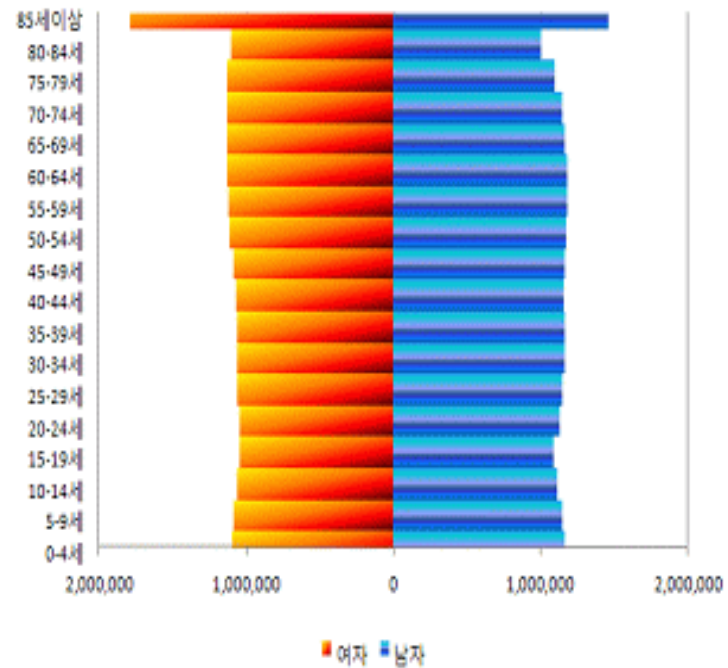
통계청 추계(2100년)



출산율 1.6(2100년)



출생아 45만명(2100년)



▶ 사회보장 개념 전환

- 선별적 제한적 복지개념 → 보편적 종합적 복지체계

▶ 사회보장의 중심축

- 공공부조제도 →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

▶ 다층적 보장시스템 구축

- 사회적 위험에 대해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으로 2원화

▶ 교육 및 훈련

- 평생에 걸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관리 가능 시스템 정비

▶ 고용

-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을 통한 일의 만족도와 효율성 제고

▶ 보건

- 예방 위주의 보건의료인프라 구축과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최소한의 안전망 가동

▶ 각종 보건 및 복지통합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4. 고용창출지향적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 ▶ 현금급여 제공은 지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 우선 제공
- ▶ 시설·기관 중심의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효율화, 경쟁력 제고
- ▶ 공공재 부문: “경쟁 및 책임경영” 시스템 도입 및 내부시장원리 (internal market principle) 강화

5. 관리 및 제도 효율성 제고

기본 방향

▶ 중복 급여 및 중복 제도 통합

▶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틀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간 연계체계와 one-stop-service 체계 구축

▶ 서비스 행정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 분립적 관리운영체계 통합을 통한 비용효과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6. 가계·기업·사회·국가의 공조

기 본 방 향

▶ **적정한 부담 증가를 통한 보편적인 복지영역 확보**

▶ **부담과 급여의 재분배 시스템 정립**

▶ **재원: 가계, 기업,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복지공조체계 구축**

▶ **중앙과 지방간 비용분담 구조 개선과 비효과적인 지원체계 정비**

▶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 발휘 여건 조성 및 가족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역할 제고**

IV

당면과제와 정책대응

1. 소득보장
2. 건강보장
3. 재해보장
4. 고용보장
5. 복지재정
6. 관리시스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특수직역연금 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설정 필요
 - 기초노령연금 급여비용은 2028년 GDP 대비 1.4%(급여액 A값의 10%, 수급대상 70%)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분담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 복지재정 압박 예상
 - * 현정부 국정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를 위해 선별적인 공공부조안과 기초연금으로의 전환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논의 부족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방안

1안

 **현행 제도체계 유지(국민연금과 선별적 기초노령연금) 및 향후 기초노령연금의 최저소득(연금)보장제도로 전환**

-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거나 수급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대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성격으로 제공
- 국민연금 급여율은 2028년경 4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추후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4~16%까지 상향조정
- 장점: 제도 개혁부담과 국가 재정부담 현행 유지
- 단점: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부담, 기초연금이 선별적이고 부조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2안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 + 국민연금
균등부분 급여를 기초연금만큼 하향 조정

- 국민연금 균등부분을 분리하여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한 ‘기초연금’ 구성
- 국민연금 급여율은 2028년 30%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은 11~12%로 조정
- 장점: 모든 노령계층에 보편적 기초연금 제공 가능
- 단점: 노후소득 보장으로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아져 제도의 위상 약화,
국가 재정부담에는 부정적 영향

3안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 + 국민연금 현행제도

- 두 제도를 분리된 독립제도로 운영하되, 기초노령연금은 노령계층 100%로 확대
-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급여율 40% 수준으로 운영하며, 보험료율은 14~16%까지 상향조정
- 장점: 모든 노령계층에 보편적 기초연금 제공 가능,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도 유지
- 단점: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및 수익비 1이하 세대 출현 가능성,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유기적 관계설정 미흡에 따른 부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특수직역연금 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특수직역연금 개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적립기금 고갈

▶ 2009년말 법개정으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재정효과는 크지 않음.

▶ 제도개혁 시점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적
수지균형체계 구축

▶ 과거 가입기간에 대한 미적립 부채액은 별도로 적립하는 개방형
수지균형체계로 재설계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특수직역연금 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공공부조제도는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내용을 차등화하여 전체적인
공공부조대상자의 수를 적게 유지

근로무능력자에게 초기에는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유지하고, 경제사정 개선과 함께 적정 수준(National Optimum)
보장으로 전환

근로유능력자에게는 근로를 장려하는 자립지원에 역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을 별도 제도로 분리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통합 검토
 - ▶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통합관리하되, 산재발생에 따른 요양급여는 재원을 구분하여 조달
 - ▶ 예방의료 강화: 건강한 생활습관 실행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강화
 - ▶ 공공의료부문 역할 정립: 1차의료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확립
- ▶ 공급자 비용의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 직종에 따라 분리된 산재보험체계 전면 통합 방안 마련
- ▶ 산재보험 급여수급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 산재보험 급여체계 재정비와 방만 운영 감소 노력
- ▶ 산재보험재정방식을 현재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전환
- ▶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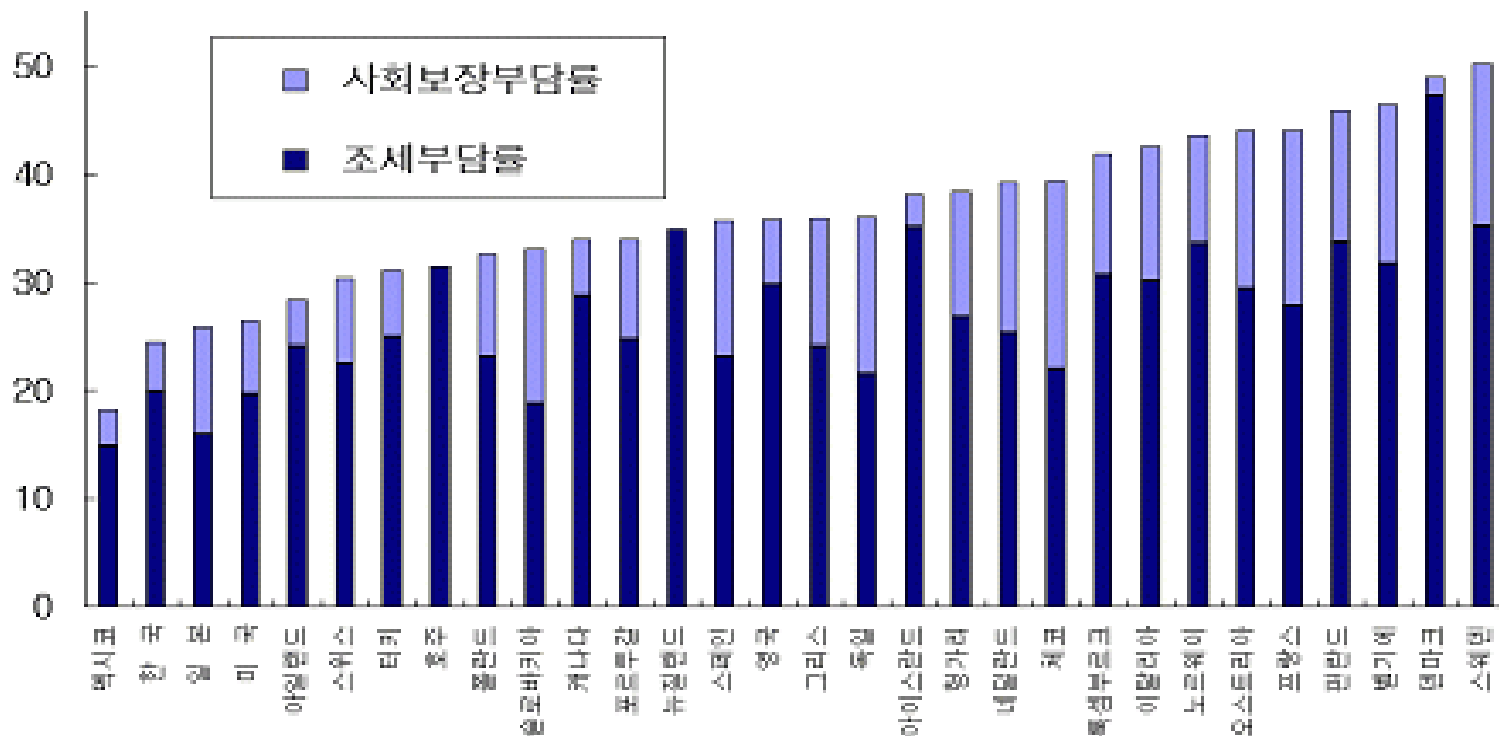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 1차적 국민복지 기본선으로서 고용보장을 위한 국가 개입 및 책임 강화
 - 불황기 고용안정을 위한 선도적 고용 노력
 - 민간 사업주의 고용노력을 위한 조세 및 지원정책 실행
 -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 및 고용알선
- ▶ 2차적 국민복지 기본선으로서 연령, 성, 장애 유무에 따른 고용 차별을 철폐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고용증진 노력
-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5. 복지재정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2002년)

(GDP 대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5.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 4대 사회보험료: 소득세를 중심으로 부과하되,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에도 배분
- ▶ 산재보험 재원은 기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
- ▶ 영세 자영업자: 정액의 사회보험료 부과 방안 검토
- ▶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보장세, 술·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
- ▶ 복지재원의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배분을 위한 국가책임과 민간책임 구분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추진 및 보험료 부과업무 일원화 작업 병행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조기 안착과 보완

▶ 다양한 사회복지 현금 및 현물서비스 전달체계를
one-stop으로 재구축

▶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전달체계
횡적·종적 설계

감사합니다

